



국정감사서면질의서

피감기관 : 경찰청

10월18일(월)

국회의원 이영순

민주노동당 자료를 공안문제연구소에 감정의뢰 한 것에 대한 추가질의

가) 경찰청 산하 공안문제연구소에서 민주노동당 중앙당과 지부, 지구당 및 산하 조직의 자료와 문서들을 감정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1. 별첨된 문건 각각을 입수 취득한 경위와 입수 취득한 자
2. 별첨된 문건 각각에 대해 감정을 의뢰한 사유와 목적, 감정의뢰한 책임자
3. 별첨된 문건 각각의 감정결과서(원본대조필사본)
4. 별첨된 문건 각각의 감정결과에 따른 조치 내용과 그 결정을 한 책임자
5. 1998년 1월1일 부터 2004년 9월31일까지 공안문제연구소에서 감정한 문서 내역 일체
6. 2002년 8월1일 이후 현재까지 공안문제연구소에서 감정한 내역서(원본대조필 사본)

나)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서울시학생위원회, 연세대학생위원회, 고대학생위원회에 에 대해 2002년 이후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내사 또는 수사한 기간, 수사결과, 수사담당 기관과 책임자.

다) 아래 목록의 문건에 대한 감정의뢰와 감정결과 통보관련 공문서 사본 일체(원본대조필 사본)

일시	문건제목	작성자	감정의뢰자
20010317	이론과실천창간준비1호	민주노동당	국가정보원
20010317	이론과실천창간준비2호	민주노동당	국가정보원
20010317	정치학교	민주노동당과주지역본부	국가정보원
20010317	통일에대한다양한이해	민주노동당과주지역본부	국가정보원
20020107	이론과실천(창간준비3호)	민주노동당	국가정보원
20011017	민주노동당특보		기무사

20020118	자주통일위원회28차회의	민주노동당자주통일위원회	기무사
20021223	고려대학교학생위규칙	민주노동당	기무사
20030117	운영위원후보출마소견서	민주노동당고대학생위원회	기무사
20030212	2003년한반도전쟁위기	민주노동당고대학생위원회	기무사
20030212	겨울방학정치학교강연기획	민주노동당고대학생위원회	기무사
20030212	전면적혁신비약적연대	민주노동당고대학생위원회	기무사
20030212	새로운연대기구의건설로	민주노동당고대학생위원회	기무사
20030218	노동자투쟁을지원하자	민주노동당학생위	기무사

라) 민주노동당의 공식문건과 자료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감정의뢰한 것이 적법하고 타당했는지에 대해 다른 당의 강령, 당대회 및 회의자료 당홍보물을 비교하여 입증하기 바랍니다.

마) 국가보안법철폐, 이라크전쟁반대, 주한미군철수, 비정규직 철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 등 국민의 상당수가 지지하며 다른 당에서도 주장되고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는 사항을 민주노동당의 공식문건과 자료감정에서 찬양동조, 선전선동으로 감정의뢰한 것에 대한 공안문제연구소의 편파적이거나 의도성이 없었다는 것을 다른 감정대상자료들과 비교하여 입증하기 바랍니다.

바) 1998년부터 2004년 7월까지 민주노동당의 자료를 공안문제연구소에 감정의뢰하는 동안 이의 결정에 관여하거나 보고받거나 인지한 경찰청 간부의 직책과 이름.

아) 경찰청장이 민주노동당 자료를 감정의뢰한 것에 대해 언제부터 무엇에 대해 보고받았는가. 보고받고 취한 조치는 무엇이었는가.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관련 질의

도로교통법 제71조2에서 정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약칭 '전문학원')은 1995년 정부(경찰청)가 운전면허 기능시험의 기능을 위임한 학원으로서 경찰청이 일정 기준을 갖춘 운전학원에 대해 '전문학원' 으로서 지정한 것임.

전문학원의 경우, 분명히 정부의 운전면허 기능시험 기능을 위임한 공적 시설인데다, 도로교통법 제71조 11호에 의해 전문학원의 '기능검정원' 과 '기능강사' 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책임(수뢰죄, 공문서위조죄 적용)을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문학원의 운영은 철저히 민간의 상행위처럼 방치되고 있음.

더구나, 경찰청이 발표한 2003년도 면허취득자의 교통사고 건수 및 행정처분 건수를 비교해 보면, 전문학원 출신 면허취득자의 경우 828,410명중 4,071명(0.49%)이 교통사고를 유발한데 비해 일반 면허시험장 취득자의 경우 187,047명 중 1,859명(0.99%)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행정처분 건수는 각각 2,327명(0.28%)과 1,690명(0.90%)로 나타남으로써, 전문학원 출신 면허취득자의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절반 수준이고, 행정처분 건수는 1/3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 이는 전문학원의 사회적 기여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음.

한편, 1999년 운전면허취득자의 56.1%(798,107명)에 불과하던 전문학원 출신 면허취득자 비율은 2003년도에는 81.6%(828,410명)으로 향상됨으로써, 이제는 전문학원이 우리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런데, 1999년에 1,422,378명에 달하던 전체 면허취득자는 2003년도에 1,015,457명으로 축소함으로써, 운전 면허 취득 희망자가 감소하고 있음. 문제는, 이 기간에 전문학원수는 428개에서 오히려 510개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그 결과, 전문학원간 과열 경쟁 및 불법 교습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고, 운전학원 종사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위장폐업, 노조 해체 강요, 노조 간부 해고 등)마저 일반화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 운전면허 제도를 보면 전문학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일반 면허시험장에서 면허시험이 취득되고 있고, 전문학원 아닌 일반 운전학원을 존치함으로써, 결국 운전교육에 대한 탈법이 자행될 소지를 남기고 있는데다, 전문학원간 과당 경쟁으로 공적

기능을 위임한 전문학원의 사회적 지위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음.

그럼에도, 전문학원의 제도 개선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경찰청은 운전면허시험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나 전문학원의 설립, 폐원에 대한 규제, 그리고 전문학원의 공적 기능 유지를 위한 공적 지원 등은 도외시하고, 오로지 전문학원간 적자생존(전자체점기기 도입 의무화 등)만을 유도함으로써, 전문학원을 제도화시킨 정책을 제대로 책임있게 추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한 경찰청에서 운전학원의 문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 조사결과와 제도개선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 주기 바람.

경찰청고용직공무원 직권면직과 관련한 질의

1

경찰청에서는 고용직 공무원을 직권면직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고용직공무원의 직권면직의 사유가 직렬변경 등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직공무원의 직제는 사실상 89년 폐지되었지만 경찰청에서는 89년 이후로도 2002까지 지속적으로 신규채용해왔습니다.

98년까지 일부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으로 승급하고 2002년에는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승급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음에도 인력들을 운영함에 있어 고용직공무원을 직권면직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 일입니다.

고용직공무원의 직권면직은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무리한 조치라고 보는데 이전 사례들을 적용하지 않고 직권면직하는 방식을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고용직공무원이 오랜기간 경찰업무에 종사해왔으므로 역할을 제대로 살려주는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하면 더욱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될 것인데 굳이 직권면직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직권면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당행위도 발생하였습니다. 충남서산경찰서의 경우 2003년 12월31일 7-8명정도의 고용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 대상인 5명을 선정하는 심사를 거치고 당일 아침에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애엄마는 필요없다. 생생한 애가 필요하다.” 는 말을 들으며 사표를 강요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관과 결혼한 또 다른 고용직 공무원의 경우는 청문감사실에 경찰관인 남편을 불러 “인사에 지장이 있을수 있으니 조용히 나가라” 식으로 자진 사직을 강요당했습니다.

경찰청장은 이러한 부당 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3

대규모 직권면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에서는 일방적인 직권면직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용직 공무원의 역할을 대신할 인력을 일용직으로 채우고 있는바 이것은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인력운영에서 고용직공무원들의 기능은 없어진 것이 아닌데 고용직은 면직시키고 일용직으로 그 자리를 다시 채우고 있습니다.

.. 심지어는 고용직공무원으로 퇴직하였다가 일자리를 제대로 갖지 못해 다시금 경찰에서 근무하던곳으로 일용직으로 다시 들어온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이 고용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요구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아예 고용직을 다 면직시키려고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경찰청 여성복지 확보 대책 (여성복지시설, 출산휴가, 보건휴가)

여경창설 58주년이 되었지만 아직 경찰서에서 여성들의 비율은 4%대를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번 서울시청 국정감사장에서도 봤듯이 여성경찰관들이 수사부서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도 여전히 손님을 접대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올 7월에 있는 여경창설58주년 기념식행사에서 최기문 경찰청장이 최근 경찰청의 미아찾기 성매매피해여성보호 등 사회적 약자보호활동에 있어서 여성경찰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치사한지 뒤라서 더욱 문제가 됩니다.

이번 서울시경 국감에서 안내와 차대접등에 여경들을 동원한 것은 여경들이 대여성범죄와 민생현장에서 공헌한 정도나 역할과 무관하게 여전히 그저 고정된 성역할에 따라 차별받고 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여성경찰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역할이 증가해도 성차별의식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여경들을 위한 복지시설과 모성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지시설, 출산휴가와 생리휴가 이용율 등에 대한 전반적 요구조사와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1

경찰청산하 보육시설 문제

직장내 보육시설 설립 근거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경찰청산하에 보육시설이 단 한곳도 없다는 것은 경찰청의 보육정책에 대한 관심과 인식정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300인 이상의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직장내 보육시설을 갖고 있는 사업장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있고,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직장내 보육시설을 확대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성부에서도 관련법개정을 통해서 2005년부터 남녀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최기문 경찰청장도 여경창설58주년 기념식에서 2005년 경찰청에 24시간 야간 탁아가 가능한 직장보육시설 설치로 여경과 맞벌이 경찰관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가사관계로 체력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 여성전용 체력 단련장을 설치하는 등 복지향상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이미 밝힌바 있습니다.

여경들을 비롯한 경찰관들의 업무특성상 24시간 보육시설은 일선경찰관들이 민생치안에 전념하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전국의 경찰관서로 확대해야할 것입니다.

여성부 계획대로라면 경찰청 산하기관 중 300인 이상 규모관서에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해야하는데, 300인 이상관서가 몇 곳이며 설치되어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또한 2005년 경찰청예산에서 이들 관서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기위한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으며 내년말까지 몇 개의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까?

아울러 2차 여성발전 기본계획이 끝나는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계획은 무엇입니까?

2

여성복지시설현황

구 분	숙직실 없는 곳	여성복지시설 전무한 곳
부산지방청	본청, 중부서, 남부서, 해운대서,	
대구지방청	남부서, 북부서	
인천지방청	강화서	강화서
경기지방청	성남중부, 부천중부, 일산, 안산, 광주, 포천	성남중부, 일산, 안산
강원지방청	강원청, 정선서, 인제서,	정선
전남지방청	서부, 장흥,	서부, 장흥
경북지방청	본청, 안동서, 영천서, 울릉서,	울릉서
경남지방청	본청, 통영서, 합천서, 함양서, 의령서,	

표에서 부듯이 경찰청 산하 관서 중에서는 여성을 위한 복지시설이 전무한 곳이 경찰서중에도 8곳이나 됩니다.

특히 장시간 격무에 시달리는 여성경찰관들이 잠깐의 휴식조차 취할 곳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성폭력 성매매관련 수사등에서 여성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경찰관의 배치를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여성경찰관의 일선수사과정에서의 역할이 증가되는 만큼 복지시설도 그에 걸맞게 시급하게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청내 여성 복지시설 확보와 여성경찰관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2005년 계획 및 예산확

보내역. 연차적 계획, 예산확보 내역 등 세부적인 계획안을 수립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3

여성만을 위한 휴가이용율

행정자치통계연보의 전체공무원의 출산휴가이용현황을 보면 휴가일수가 문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90일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다만 대체인력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업무공백에 따른 부담이 없도록 배려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2003년 행정자치통계연보에 의하면 공무원 출산휴가시 대체인력비율이 58.9%에 이르고 국가직과 지방직을 포함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용직이 보편화되면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번 2003년 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산휴가 일용일수와 보건의용율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본 결과, 아직 통계부터도 불확실하고 기준이 불분명하여 일선 경찰서에서는 잘못된 보고서에서부터 신청자가 없어서라는 변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1인당 출산휴가일수와 보건의용율을 일선서 별로 다시 수정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나 보건의용율도 마찬가지로 일선에 있는 경찰관들이 중장기 휴가를 떠나기 위해서는 인력의 공백없이 자신의 일을 대신해줄 대체인력이 꼭 있어야 합니다. 대체인력이 없다면 웬만한 일에는 휴가를 신청할 엄두조차 못하게 됩니다.

실제 일선경찰관들의 과로사에 대한 보고가 끊이지 않는 것도 휴식없는 과중한 업무때문입니다.

여성경찰관의 보건의용율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서 경찰청에서는 '신청하는데 휴가를 허락하지 않은 사례는 없을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여성경찰관들이 법이 보장한 보건의용율조차 이용율이 저조한 것은 휴가를 신청할 수 없는 조건때문입니다.

보건의용율은 장시간의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의 업무특성상 최소한의 모성보호조치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경찰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보건휴가는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모성보호규정입니다.

단지 견디기 힘든 통증 때문에 하루를 쉬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여성들의 건강과 관련된 조치이므로 당연히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합니다.

.. 경찰청 나름의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보건휴가이용율이 저조한 원인과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의견제시하고, 출산휴가기간동안 대체인력 활용비율(출산휴가이용자 대비 대체인력)과 대체인력을 활용하는데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특히 대체인력과 관련해서 인력증원등이 요구된다면 그에 대한 해결방안도 함께 제시바랍니다.

4

경찰청 가정폭력사건 대응

가정폭력상담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그 특성상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이 꼭 필요하며 가정폭력사건을 1차적 조치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경찰관이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범죄는 일반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여기는 가정내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자칫 범죄행위로 보기보다는 흔히 있는 가족갈등 정도로 폄하해서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에 의한 폭력이기 때문에 장기간 계속되고 있고, 드러난 피해사실에 비해서 피해자와 폭력행위자는 물론이고 그들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집안싸움이 아니고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일선 경찰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보호와 폭력행위자 치료 및 격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가정의 행복과 피해자의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일선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에서는 가정폭력사건을 최초 접한 경찰관들이 가정폭력의 위험으로부터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을 요청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경찰의 신청에 의하여 검찰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

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의 임시조치의 내용은 많이 알려진 대로 ①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등 격리 ②피해자의 주거, 직장등에서 100미터이내의 접근금지 ③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④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정보호사건으로 되었을때 보호처분의 내용은 일반폭력사건의 경우와 다르게 피해자 보호와 폭력행위자 치료를 위한 조항이 아래와 같이 들어있습니다.

①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②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③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감명령 ④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⑤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⑥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⑦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등 피해자인권은 보호해주고 행위자는 치료받거나 단지 피해자로부터 격리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가정폭력관련법률의 목적이 처벌자체에만 있기보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폭력행위로부터 가정의 안녕을 지키는데 주안점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경찰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경찰청이 제출한 2000~2004년8월까지 가정폭력사건 발생건수 및 조치현황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별법상 가정보호사건으로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의견송치한 비율이 2000년 29.4%였던 것이 2004년에는 17.9%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표참고)

가정폭력범죄 검거건수 대비 가정보호사건 의견송치율(%)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8월
계	29.4	31.3	24.4	25.5	17.9
서울지방청	27.0	27.5	16.5	16.7	8.9
부산지방청	24.5	14.9	12.6	12.7	6.4
대구지방청	2.8	15.7	13.3	14.5	10.2
인천지방청	64.5	66.5	53.1	52.9	39.1
울산지방청	60.6	76.6	62.5	65.8	43.5
경기지방청	37.2	33.8	45.9	51.8	39.8
강원지방청	41.5	29.4	28.8	16.8	16.9
충북지방청	58.8	53.5	33.4	21.6	21.8
충남지방청	31.9	35.9	10.5	16.4	8.0
전북지방청	22.1	55	33.7	11.0	6.2
전남지방청	12.7	17.8	17.2	18.8	13.2
경북지방청	15.8	11.7	9.8	4.5	3.6
경남지방청	33.8	29.5	11.1	1.8	4.1
제주지방청	0	0	0	1.6	0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의 가부는 검찰의 신청과 법원판결에 따르겠지만 가정폭력사건을 처리하는 최초기관인 경찰의 의견송치 여부도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데도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가정보호사건으로 의견 송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와 가정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생긴지 7년이 지난 지금 일반들 사이에서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높아졌는데 일선경찰관들은 가정폭력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짐작됩니다.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가정보호사건으로 의견 송치율이 떨어지는 그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가정폭력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길 바랍니다.

경찰청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일선경찰의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폭력에 대한 별도의 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고 여성폭력범죄 전반을 함께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종합학교 내 여경만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수사요원양성과정’ 3주간의 교육기간 중 가정폭력교육은 단 3시간에 불과하며(외부전문가교육 중) 나머지는 성폭력등과 혼재되어 교육. 그 외 수사보안연수소 내 ‘여성폭력예방수사과정-1주일과정’ ‘여경기동수사대 워크샵’ 등에서도 여성폭력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가정폭력전문교육도 아니고, 그나마도 혜택을 받는 인원이 3개 과정을 합쳐서 752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여성폭력사건을 다루는 부서인원의 전체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일선파출소인원들은 더욱 교육에서 제외된 인원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선에서 가장 많은 가정폭력사건을 최초 접하게 되는 일선파출소 근무자들의 경우에는 과연 몇%정도가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육을 일년에 1회 이상은 받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 내 가정폭력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과정은 없고, 가정 폭력범죄를 최초로 접하는 일선파출소근무자를 위한 교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폭력사건과 관련해서 상담원양성을 위한 100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경찰서내에서 가정폭력문제를 전담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에 준하는 정도의 교육과정은 이수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그 정도의 전문적이 교육을 일상화 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 내 가정폭력전문수사요원의 양성과 일선경찰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정폭력관련범죄의 특성과 피해자/가해자심리, 관련법해석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과 업무지침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일선 관서별로 가정폭력에 대한 전반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교육내용과 함께 그 현황을 제출바랍니다.

3.

성매매방지법 강력시행 촉구

성매매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되고 경찰의 집중단속기간이 시작된 지 한달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보도됐듯이 법시행에 따른 각종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성매매방지를 통해서 반인권적인 성매매를 금지하고 그 피해여성을 구하기 위한 법률을 본래취지보다는 성매매를 중심으로 구축된 자본이나 업주들과 여성단체간의 대결인양 그 초점이 호도되면서 법시행 초기부터 법의 본래취지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중재와 역할이 요구됩니다.

실재 성매매알선업자로서 성매매여성을 감시, 강금, 착취하는 등 반인권적인 행위를 자행했던 집창촌 성매매업주를 중심으로 거짓된 논리로 성매매행위의 부당성을 생계의 문제로 호도하려는 갖가지 시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들이 지속되면서 성매매알선 업주들은 생존권보장등 동정적 논리를 개발한데 힘입어 여성단체나 그 간부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정부나 경찰은 더욱 적극적인 대 국민홍보와 단속을 통해서 성매매 방지법이 조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기 바랍니다.

집중단속기간이 지나고 나면 경찰에서 성매매전담반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될 텐데 이들의 강력한 활동과 성매매피해여성과 그 여성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이해폭을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뒤받침 되기를 촉구합니다.

법 시행이후 비록 한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정부가 피해여성을 위한 대책등을 총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법취지를 알리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탓에 법시행과 함께 단속위주의 집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성매매업을 통해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반 인권적 행위와 착취는 물론이고 온갖 탈세와 불법을 자행해온 업주들의 반발과 거짓된 생계논리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집중단속기간 동안의 단속 결과와 법시행 이후 법집행 과정에서 경찰이 분석한 법의 성과와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정리하여 자료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성매매행위를 전제로 하거나 성매매행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채권에 경찰의 입장과 대응전략은 무엇입니까?

- 성매매를 전제로 하는 빚(선물금)에 대한 처리와 이에 대한 성매매알선업주가 행하는 강제추심에 대한 경찰의 입장

- 성매매를 전제로하는 직접적인 채권은 아니지만 성매매에 이용된 홀복 세탁비, 화장품비, 성구매남성에게 제공되는 음료와 티슈구입비등 가외빚에 대한 경찰의 입장

- 지난 10월 4일 전남 성매매지역 상담소에서 성매매여성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업주들이 여성에게 빚을 갚고 가야한다고 다그치며 구출과정에 있는 여성을 가로막고 동행했던 상담센터 상담원에게까지 위협과 협박을 했음에도 경찰이 책임을 방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고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한 업주들의 논리는 비록 성매매라는 불법적 행위에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으로서 유효하다는 것인데 일선 경찰의 경우 업주의 이런 논리에 당황하여 현장에서 제 역할을 못하는 일이 종종있습니다.

성매매피해여성 구출과정에 벌어지는 유사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집단형 성매매지역에 대한 집중단속과 아울러 산업형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계획은 어떻게 수립하였는지 밝히고 이를 위해서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처와 그 내용을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이영순의원이 국감준비기간동안인 10월 1일자로 자료요구했던 성매매수사 관련사항인 아래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방청단위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바랍니다. 기 집행한 내용이 없다면 계획된 내용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1. 성매매수사관련 경찰청 교육내역
2. 성매매관련 전담반 운영현황(2003년 8월, 2004년8월 비교) 배치인원 및 전담한 내용
3. 성매매관련 전담반 대상 성매매관련법 교육현황
4. 성매매여성긴급지원센터 접수사건 처리현황 및 피해여성에 대한 조치내용

4.

여성경찰 확대 및 여성경찰간부 양성을 위한 정책

중앙인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말 현재 경정이상 여성간부는 단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8월31일 현재 13명에 불과한 것으로 중앙인사위원회자료와 다소 차이가 났다. 이들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본질의서는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가 최근의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작성하기 바랍니다.

경정을 5급으로 볼 때 경정이상의 여성은 단 13명이고 이는 전체경정이상 간부의 0.7%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또한 경위이상의 여성을 간부로 봤을 때도 전체대비 비율이 2.4%에 불과해서 2003년말 중앙행정직 중 5급이상 여성공무원비율 6.4%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 급	총경이상 (4급)	경정 (5급)	경감	경위	경사 (7급)	경장 (8급)	순경 (9급)
			(6급)				
전체	476	1,287	2,946	9,219	32,480	30,516	15,422
여경	3	10	51	276	627	942	1,780
여경비율	0.6	0.8	1.7	3.0	1.9	3.1	11.5

(2004년 8월31일기준)

여성경찰들은 2004년 8월 31일 현재 3689명중 1780명인 48%가 순경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전체경찰대비 순경의 비율이 16.7%인 것을 감안한다면 지나치게 여경이 순경이라는 하위직급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순경으로 근무하는 여경 1780명중 57%가 생활안전 분야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여성경찰관은 지나치게 하위직에 쏠려있고 업무도 생활안전 업무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경찰관들이 다양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실력있는 간부로 성장할수 있는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또한 최기문 경찰청장은 올 7월 1일 여경창립58주년 기념사에서 여성경찰비율을 10%대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는데 2004년 8월 31일 현재 4.0%에 불과한 여성경찰의 비율을 10%대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과 그 근거를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바랍니다.

또한 현 정부가 2차 여성발전기본계획을 통해서 여성공무원중 간부비율을 2010년까지 1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고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인사관리지침을 통해서 여성간부비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여성할당제등)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경찰청의 연도별 여성간부임용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여 여성간부를 확대하기 위한 경찰청 인사지침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鑑 定 書

1. 對 象

가. 문 건 명 : 민주노동당 울산광역시지부 2003년 정기대의원대회

나. 작 성 자 : 불명시

다. 발행처(일) : 민주노동당 울산광역시지부 (2003. 3)

2. 分 析

가. 개 관

이 문건은 「민주노동당 울산광역시지부」의 《2003년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으로 창당선언문, 대회순, 2002년 사업평가 및 2003년 사업계획안 등을 수록하고 있는 2003년 활동지침서이다.(민주노동당 창당선언문은 별도의 정밀감정이 필요함)

나. 문제점

첫째, 동 단체의 투쟁과제로 “미국의 내정간섭 및 한반도 전쟁책동 분쇄투쟁”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대남노선과 일치하는 주장으로 결국 북한노선을 정당화하고 선전하는 것이다.

“ 투쟁분야 ... (2) 미국의 패권군사전략과 경제침략에 맞서 다양한 계급,계층과 연대 연합을 실현하여 한반도 전쟁책동을 분쇄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한다”(32면)

“ 민족자주권 수호투쟁 전개 (1) 미선이 효순이 투쟁을 통한 소파전면개정 및 부시사과쟁취 (2) 미국의 내정간섭 및 한반도 전쟁책동 분쇄투쟁”(35면)

둘째,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동 단체의 민주민권투쟁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대남선동노선을 정당화하고 선전하는 것이다.

“ 민주민권투쟁 (1)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이하 생략...” (35면)

3. 總 評

이 문건중 위 부분은 최근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동노선과 일치하는 “미국 의 한반도 전쟁책동 분쇄,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동 단체의 투쟁과제로 설정 하고 이의 투쟁을 선동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북한당국의 노선을 정당화하고 선전하는 것인바 위 부분은 친북용공성(親北容共性)이 있다고 분류된다.

2003 年 4 月 14 日

公安問題研究所

연구관

(印)

鑑 定 書

1. 對 象

- 가. 文 件 名 : 불잉결 이
- 나. 作 成 者 : 김창현(발행인)
- 다. 發 行 處(日) : 민주노동당 울산광역시지부

2. 分 析

1) 개요

- 0 이 문건은 “민주노동당 울산광역시지부”에서 발행한 11쪽 분량의 당원교양 소식지로서,
- 0 전반적인 내용이
 - 지지부 주요사업 및 당보 해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2) 내용 분석

- (1)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민중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비정규직 투쟁에 임하는 사회당의 목표로 당의 통일단결, 계급성 강화, 당의 기층 강화를 제시하고 있음.

< 예문 >

- 비정규직 문제해결 없이 민중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 비정규직 투쟁에 당이 전면적으로 나서자...일상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쪽)
- 비정규직 투쟁에서 당의 목표...당의 통일단결 실현...당의 투쟁성, 당파성과 계급성

의 강화, 당의 기층 강화...이들과 적극 연대하고 혈연적·조직적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당의 기층을 실질적으로 대규모로 강화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5-6쪽)

(2) 공직선거 후보를 당원이 선출하여 민중주체 진보진영의 면모를 구축하고, 정당 개혁의 기폭제, 당의 통일단결 실현의 촉매제로 활용해 나갈 것을 선동하고 있음.

< 예문 >

-당원이 실제로 주인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아래로부터 힘을 결집하는 민중주체 진보정당의 면모를 구축...한국 제정당의 당내 민주주의를 강제하여 정당 개혁을 열어 가는 기폭제...공직선거 후보 선출을 한판 정치축제로 승화시키자...공직선거 후보 선출을 당의 통일단결 실현의 촉매제로 활용하자. (10-11쪽)

한다고 주장함.

“현 시점에서는 불가침조약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이를 미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왕성한 반미 자주화 운동으로 미국을 압박해야 한다. …”(4면)

3. 總 評

본 문건에서는 1) 미국 세계 패권주의에 의해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보면서 2) 한반도 위기의 해소를 위해 현 정부가 반미 자주화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본 문건은 반미자주의 시각에서 현 정부 통일정책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시사되는 <반정부> 수준의 유인물로 판단됨. 끝.

2003 年 2 月 20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印

<별첨자료목록>

접수일자	제목	발행처	의뢰기관
1998	전국실업자동맹(준)제2호	국민승리21실업대책본부	
1998	국민승리21(98.5.1 유인물)	권영길	
1999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 기관지준비 호외	민주노동당준비위	
1999	진보정당부산창당 부산지역추진위원회 결성대회	진보정당창당부산지역추진위원회	
1999	진보정당창당울산추진위원회결성대회	진보정당창당울산추진위원회	
1999	가칭 민주노동당 창당2차 정책위원회의	민주노동당창당준비위원회	
1999	<자료집>외대학생위원회 결성식	가칭민주노동당외대학생위	
1999	민주노동당 10/2대학로로 모입시다	가칭민주노동당국가보안법철폐대회	
1999	진보정당창당울산추진위원회2차추진대회	진보정당창당울산추진위원회	
1999	진보정당추진위기관지준비4호	진보정당추진위원회	
1999	진보정당추진위기관지준비호외	진보정당추진위원회	
1999	마중물 제10호	국민승리21동대문증량지부	
1999	강령위>강령시안최종본전체	권영길	
1999	진보정당창당추진위강령기초위원회강령전문	진보정당추진위원회	
1999	강령해설	진보정당창당준비위원회	
2000	희망의불씨1	민주노동당구미지역준비위	
2000	희망의불씨4	민주노동당구미지역준비위	
2000	희망의불씨7	민주노동당구미지역준비위	
2000	이제출발이다(민주노동당강령논쟁과우리의...)	장석중(민주노동당교육부장)	
2000	일하는사람들의희망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2000	열린주장과대안(호외)	민주노동당서울지역학생위원회	
2000	노동시간단축 무엇이 쟁점인가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2000	진보정치(호외)	민주노동당
2000	진보정치2호	민주노동당
2000	우리아이들에겐다른세상을	민주노동당
2000	노동자민중의독자적정치세력화를위한결의문	민주노동당전북지부추진위
2000	창당선언문	민주노동당전북지부추진위
2000	등록금인상반대2호	민주노동당서울지역학생위원회
2000	점거농성의수치	민주노동당서울지역학생위원회
2000	민주노동당(준)조직사업책임자회의	민주노동당창당준비위원회조직위
2000	민주노동당(준)조직사업책임자회의	민주노동당창당준비위원회조직위
2000	(가칭)민주노동당창당준비위원회20차상집회의	민주노동당창당준비위원회
2000	열린주장과 대안-호외	민주노동당 학생그룹
2000	열린주장과 대안-6호	민주노동당 학생그룹
2000	열린주장과 대안-호외	민주노동당 학생그룹
2000	진보정치(호외)국보법폐지이제는상식권영길	민주노동당
2000	희망의불씨3	민주노동당구미지역준비위
2000	희망의불씨6	민주노동당구미지역준비위
2000	열린주장과대안(호외)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2000	민주노동당2000년가을농촌활동	민주노동당대의협력국
2000	사람세상9	민주노동당대전시지부추진위
2000	진보정치18호	"권영길,이광호"
2000	진보정치20호	민주노동당
2000	할말은하고살자제13호	민주노동당광주시지부
2000	한반도의평화구축과통일을위한사업계획	민주노동당
2000	대회사	민주노동당광주시지부
2000	민주노동당광주시지부창립선언문	민주노동당광주시지부
2000	남북정상회담이후자주통일위원회사업계획	민주노동당

2000	민주노동당의 전략과 전술	민주노동당
2000	진보정치(2000 노동절기념-호외)	민주노동당(권영길)
2000	등록금인상반대(등록금을동결하라)	민주노동당서울지역학생위원회
2000	"민주노동당당헌(시안),규약(시안)"	민주노동당
2000	민주노동당10대핵심정책과제	민주노동당
2000	민주노동당당면5대과제	민주노동당
2000	"민주노동당당헌(시안),규약(시안)"	민주노동당
2000	민주노동당창당대회관련녹취서	민주노동당
2000	민주노동당전국간부수련회	민주노동당(준)
2000	"자료집,창당기본계획 초안"	민주노동당(가칭)
2000	제5차중앙위원회	민주노동당창당준비위원회
2000	당원의 길 -신입당원용	민주노동당
2000	광범위한 진보세력이 주체가되는 진보정당건설	민주노동당창당기획위원회
2000	세계의반자본주의운동과아셈반대투쟁평가	민주노동당 학생그룹
2000	희망의불씨2	민주노동당구미지역준비위
2000	창당선언문	민주노동당
2000	자랑스런당원의길	민주노동당
2000	민주노동당단국대학생위 한달평가	민주노동당단국대학생위원회
2000	열린주장과대안3호	민주노동당서울지역학생위원회
2000	발기취지문	진보정당창당준비위원회발기인
2000	민주노동당대전시지부추진위당원총회자료집	민주노동당대전시지부추진위
2000	민주노동당소개자료	민주노동당
2000	열린주장과대안1호	민주노동당서울지역학생위원회
2000	민주노동당의꿈(당원용)	민주노동당
2000	민주노동당강령	강령제정위원회
2000	가칭 민주노동당(준)강령시안	가칭민주노동당창당준비위원회

2000 민주노동당창당대회
 2000 민주노동당당헌당규제정을위한공청회
 2000 민주노동당구미지구당구미지역추진위당원대회
 2000 민주노동당강령해설
 2000 민주노동당의전략과전술
 2000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준)준비소식지
 2000 민주노동당제7차중앙위원회
 2000 민주노동당제6차중앙위원회
 2000 민주노동당천안시을지구당규약
 2000 민주노동당창당선언문
 2000 민주노동당천안시을지구당 특별결의문
 20010131 민주노동당학생위정치캠프자료집
 ✓ 20010206 민주노동당 대전시지부결성 수련회회의자료
 20010305 열린주장과대안 8호
 20010305 열린주장과대안 7호
 20010306 민주노동당서대문마포은평지구정기총회
 20010312 민주노동당당헌
 20010317 이론과실천창간준비1호
 20010317 이론과실천창간준비2호
 20010317 정치학교(노동자정치세력화의실천주체양성)
 20010317 통일에대한다양한이해와당적실천을위하여
 20010322 민주노동당6인을석방하라
 20010403 진보정치(민주노동당특보-김우중을체포)
 20010410 동지에게말걸기(1.2월)
 20010420 2001년정기당대회
 20010611 2차당원가입운동(당원가입운동은당원을모집)

민주노동당
 "당헌,당규제정을위한공청회"
 민주노동당구미지역추진위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광주시지부
 민주노동당서울지역학생위원회
 가칭민주노동당창당준비위원회
 민주노동당창당준비위원회
 민주노동당천안시을지구당
 민주노동당천안시을지구당
 민주노동당천안시을지구당
 민주노동당부산시지부학생위원회 부산지청
 민주노동당대전시지부 충남지청 대전북부서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경기지청보안과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경기지청보안과
 민주노동당마포은평지구 경찰청(본청)보안국 보안4과 ①
 민주노동당 서울지청 남부경찰서
 민주노동당 국가정보원
 민주노동당 국가정보원
 민주노동당광주지역본부 국가정보원
 민주노동당광주지역본부 국가정보원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서울지청 노원경찰서
 민주노동당 서울지청 중부경찰서
 민주노동당서대문마포은평지구 경기지청 보안수사3대
 민주노동당 서울지청
 민주노동당 제주지청 제주서

20010724	제1차민주노동당자주통일위원회회의보고	민주노동당	서울지청 영등포서
✓ 20010816	민주노동당대전시지부4차운영위	민주노동당대전시지부	충남지청 보안과
20010820	민주노동당학생그룹연세지부정치토론	미상	강원지청 보안과
20010910	민주노동당통일방안(초안)-평화	민주노동당	서울지청 남부경찰서
20010910	민족통일에대한민주노동당의기본입장(안)	민주노동당	서울지청 남부경찰서
20010919	민주노동당자주통일위원회1차수련회7차회의	민주노동당	서울지청 영등포서
20010919	자주통일위원회6차회의(보고)	민주노동당	서울지청 영등포서
20010919	자주통일위원회8차회의(보고)	민주노동당	서울지청 영등포서
20010919	자주통일위원회10차회의(보고)	민주노동당	서울지청 영등포서
20010919	자주통일위원회21차회의(보고)	민주노동당	서울지청 영등포서
20011017	민주노동당특보(상가임대차보호법제정)	민주노동당	기무사
20011017	민주노동당특보(민생과탄무능정권에 맞서)	민주노동당	기무사
20011022	민주노동당서울특보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	서울지청 남부경찰서
20011105	민주노동당청년단국학생위창립총회	민주노동당단국대학생위원회	서울지청
✓ 20011128	민주노동당대전시지부결성대회자료집	민주노동당대전시지부	충남지청 보안과
20011206	민주노동당의당면조직적과제와분회의역할	미상	울산지청 보안과
20011207	민주노동당덕진지구당창당대회	민주노동당덕진지구당	전북지청
20020107	이론과실천(창간준비3호)	민주노동당	국가정보원
20020108	시민사회운동의현실인식과대응방향-공동정세토론회	민주노동당	서울지청 용산서
20020118	자주통일위원회28차회의보고	민주노동당자주통일위원회	기무사
20020118	자주통일위원회29차회의보고	민주노동당자주통일위원회	서울지청 영등포서
20020124	다함께(02.1.8)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경찰청(본청)보안국 보안3과 ㉞
20020219	불잉결2호(민주노동당울산광역시지부당원교양소식지)	민주노동당울산시지부주비위	울산지청 서부경찰서
20020226	다함께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경찰청(본청)보안국 보안3과 ㉞
20020307	민중진군제1호	민주노동당서울대학생위원회	서울지청 보안수사1대
20020307	민중진군제2호	민주노동당서울대학생위원회	서울지청 보안수사1대

20020307 2001민주노동당2차서울대학생당원총회
 20020307 비판의자유행동의통일기관지창간준비호
 ✓ 20020311 민주노동당(특보)-부패로얼룩진가진자들의자화상
 20020314 서구지구당 후보등록결과
 20020329 2002정기당대회
 20020403 민주노동당성북구갑지구당규약
 20020403 민주노동당(정부는 발전소매각을철회)
 20020403 민주노동당성북구갑지구당 정기대의원대회
 20020409 민주노동당학생위교육강령
 20020409 비판의자유행동의통일(창간호)
 20020416 오시라평양으로
 ✓ 20020422 민주노동당충북지구학생위34월세부계획서
 ✓ 20020422 민주노동당충북지구학생위원회건설을위한활동계획초안
 ✓ 20020422 민주노동당중앙학생위원회건설을위한1차시도지부
 20020427 창당선언문(우리는 오늘 노동자서민의투쟁)
 20020430 구미시지구당2002상반기사업계획
 20020430 민주노동당구미시지구당규약
 20020502 민주노동당제주도지부제주시지구당출범결의문
 20020520 민주노동당금천지구당강령규약
 20020530 민주노동당춘천시지구당창당대회자료집
 20020530 민주노동당학생그룹서울지역소식지준비호
 20020603 서울대선거운동본부를제안합니다.
 20020603 613지방선거승리를위한민주노동당공대당원결의대회
 20020603 2002년민주노동당2차 서울대학생당원총회
 20020611 노동자와통일6호
 20020617 열심히버틴당신떠나라(F-15선정철회)

민주노동당서울대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서울대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대구시지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서울대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충북지부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충북대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구미시지구당
 민주노동당구미시지구당
 민주노동당구미시지구당
 민주노동당제주도지부
 민주노동당금천지구당
 민주노동당춘천시지구당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서울대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서울대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서울대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통일위원회
 민주노동당금천지구당

서울지청 보안수사1대
 서울지청 보안수사1대
 충북지청 청주서부서
 대구지청 보안수사3대
 서울지청 보안수사1대
 서울지청 성북경찰서
 서울지청 성북경찰서
 서울지청 성북경찰서
 서울지청 관악경찰서
 서울지청 관악경찰서
 경북지청 보안수사1대
 충북지청 청주서부서
 충북지청 청주서부서
 충북지청 청주서부서
 경북지청 보안수사3대
 경북지청 보안수사3대
 경북지청 보안수사3대
 제주지청 보안수사대
 서울지청 남부경찰서
 강원지청 춘천시
 전북지청 보안수사1대
 서울지청 보안수사1대
 서울지청 보안수사1대
 서울지청 보안수사1대
 서울지청 영등포서
 서울지청 관악경찰서

2002 2주 5일

20020730 이랜드점거농성폭력진압규탄집회에다녀와서
 20020730 신자유주의는우리모두의삶을파괴한다
 ✓20020812 전국학생위원회(준)규정(초안)
 20020814 "대학,대학생,그리고학생운동(열린주장과대안1호)"
 20020914 민주노동당서울특보(미선아효순아)
 20020916 열린주장과대안(호외6)
 20020916 111주년메이데이활동평가서
 ✓20021002 자료집을발간하며
 20021010 민주노동당의정부시지구당신입당원교육자료집
 20021010 2002년민주노동당서울대학생위원장협의회
 20021010 613지방선거승리민주노동당과함께하는서울대운동본부
 ✓20021014 615공동선언1주년에즈음한남북한관계변화와
 20021018 미국의이라크공격을정당화하기위한거짓말
 20021018 두여중생미군장갑차에갈려죽은지110일이
 20021018 강원도학생위투쟁실천사업
 20021018 미국은테러를비난할자격이없다.
 20021018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건설의의의및운영에대하여
 20021018 민중중심한총련다운투쟁의복원을위하여
 20021111 민주노동당강원도지부창당대의원대회
 20021115 민주노동당특보(민주노동당은반부격차해소를)
 20021211 민주노동당특보(동지들함께싸웁시다)
 20021212 민주노동당특보(효순이미선이한을풀어줄)
 20021220 민주노동당목포지구당창당대회
 20021223 전문제정(민주노동당고려대학교학생위규칙제정)
 20030117 결사대당원의결의서입니다
 20030117 2003년학생회후보반미반전공동선언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권영길
 민주노동당의정부시지구당
 민주노동당서울대학생위원회
 미상
 민주노동당고양시지부
 민주노동당연세대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연세대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연세대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연세대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한양대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강원도지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목포지구당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고대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고대학생위원회

서울지청 보안수사1대
 서울지청 보안수사1대
 충북지청 청주서부서
 경기지청 보안과
 서울지청 남부경찰서
 경찰청(본청)보안국 보안3과 ㉔
 경찰청(본청)보안국 보안3과 ㉕
 충남지청 대전동부경찰서
 경기지청 보안수사3대
 서울지청 보안수사2대
 서울지청 보안수사2대
 충남지청 보안수사2대
 강원지청 보안수사2대
 강원지청 보안수사2대
 강원지청 보안수사2대
 강원지청 보안수사2대
 경기지청 보안수사2대
 경기지청 보안수사2대
 강원지청 보안수사2대
 서울지청 남부경찰서
 대구지청 보안수사3대
 서울지청 남부경찰서
 전남지청 목포경찰서
 기무사
 기무사
 기무사

20030117 총회선출운영위원후보등록자출마소견서
 20030207 자주민주통일노학연대발전적해소를선언한다
 20030207 학생운동의단결과연대를위한토론회자료집
 20030211 국가에대하여
 20030212 2003년한반도전쟁위기에대하여
 20030212 민노당고대학생위겨울방학정치학교강연기획
 20030212 전면적혁신비약적연대
 20030212 새로운연대기구의건설로한국학생운동의새날을열자
 20030218 노동자투쟁을지원하자
 20030220 613지방선거인천광역시의원후보남동제1선거구
 20030221 민주노동당특보-민주노동당은정부와두산에요구합니다.
 20030308 2003년정기총회자료(1.지구당규약개정안)
 20030308 민주노동당천안시을지구당2003년정기총회
 20030310 민주노동당당규
 20030310 당규개정해설안
 20030310 민주노동당마산시합포지구당규약
 20030310 민주노동당의약속-강령요약
 20030312 2003학번새내기여러분반갑습니다.
 20030318 2003년상반기민주노동당서울대학생위원회확대LT
 20030324 국가민주주의사회주의민중을어떻게볼것인가
 20030324 사회주의라는용어의질곡에서벗어나자
 20030324 민주노동당의대안사회는 무엇인가
 20030324 사회민주주의를솔직히주장하자
 20030324 의회제다당제에기초한민주적사회주의
 20030324 새로운사회주의민중의참여와조직화
 20030324 다른세상은가능하다

민주노동당고대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충북대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고대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고대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고대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고대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남동지역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마산합포지구당
 민주노동당천안시을지구당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합포시지구당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고대학생위원회
 이론과실천
 이론과실천
 이론과실천
 이론과실천
 이론과실천
 이론과실천
 이론과실천
 이론과실천

기무사
 충북지청 청주서부서
 충북지청 청주서부서
 서울지청 중랑경찰서
 기무사
 기무사
 기무사
 기무사
 기무사
 인천지청 보안과
 서울지청 남부경찰서
 경남지청 마산동부경찰서
 충남지청 천안경찰서
 경남지청 마산동부경찰서
 경남지청 마산동부경찰서
 경남지청 마산동부경찰서
 경남지청 마산동부경찰서
 서울지청 성북경찰서
 서울지청 보안2과
 서울지청 사이버
 서울지청 사이버
 서울지청 사이버
 서울지청 사이버
 서울지청 사이버
 서울지청 사이버
 서울지청 사이버

20030324	사회주의와사민주의알레기를넘어나가자	이론과실천	서울지청 사이버
20030324	당내의이념적분화가필요하다	이론과실천	서울지청 사이버
20030324	사회를바꾸기위해우리자신부터바꾸자	이론과실천	서울지청 사이버
20030324	민중이주인되는완전한민주주의에기초한사회주의	이론과실천	서울지청 사이버
20030324	민주적사회주의를위하여	이론과실천	서울지청 사이버
20030324	민주노동당의미래와진정한좌파의역할	이론과실천	서울지청 사이버
20030325	2002년1차민주노동당울산시지부정책토론회	민주노동당울산광역시지부	울산지청 보안수사대
20030325	민주노동당울산광역시지부2003년정기대의원대회	민주노동당울산광역시지부	울산지청 보안수사대
20030401	2003정기대의원대회	민주노동당서울대학생위원회	서울지청 보안2과
20030414	민주노동당(특보)-석유패권쟁탈위한국미국의이라크침략	민주노동당	경북지청 경주경찰서
20030424	국가가아니라자유로운생산자가주인이되는사회	이론과실천	서울지청 사이버
20030425	D-730 김대중정부3년평가와 대안	민주노동당정책위원회	서울지청 중부경찰서
20030425	청계천복원무엇이문제인가(공개토론회)	서울시지부	서울지청 중부경찰서
✓20030501	진보대보수의전선을구축하자	민주노동당청년위원회	충남지청 보안수사2대
✓20030501	민주노동당 당헌 전문(우리는 이땅에...)	미상	충남지청 보안수사2대
✓20030501	민주노동당을 강화하여 노동해방쟁취하자	미상	충남지청 보안수사2대
✓20030501	16대대선토론회2차기획회의	민주노동당대전시지부	충남지청 보안수사2대
20030506	일하는사람들의희망민주노동당2003년서울시지부정기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	서울지청 중부경찰서
20030514	"3,4월교육투쟁선전에관한제안-교육개방관련선전문안"	민주노동당연세대학생위원회	강원지청 보안과
20030514	2003년사업기조와방향(1.2003년 정세	민주노동당연세대학생위원회	강원지청 보안과
20030514	전국민중연대월례토론회자료집-미국의이라크점령	민주노동당연세대학생위원회	강원지청 보안과
20030514	민주노동당연세대학생위원영위원회(03.4.23)	민주노동당연세대학생위원회	강원지청 보안과
20030514	자랑스런당원의길(1.왜 민주노동당인가)	민주노동당연세대학생위원회	강원지청 보안과
20030514	민주노동당연세대원주학생위원회1년사업계획서(수정)	민주노동당연세대학생위원회	강원지청 보안과
20030517	비판의자유행동의통일(기관지2호03.4월)	민주노동당서울대학생위원회	서울지청 보안2과
20030701	경기도지부2003 정기대의원대회(03.2.28)	민주노동당경기도지부	경기도지방경찰청보안과

20030701 현재까지 진행된 자주통일위원회사업
 20030701 자주통일위통일정책
 20030704 민주노동당 제2차 중앙위원회(03.6.26)
 20030704 815사면에 즈음한 민주노동당중앙위원회특별결의문
 20030709 민주노동당경주시지구당만세자료집순서-강좌1정세전망
 20030723 반전위원회 첫모임-미국의불순한이라크전쟁을반대
 20030723 2003년3월 WTO교육개방이눈앞에다가오고있다
 20030723 3월 15일 국제공동반전행동에함께합시다-미국의이라
 20030725 새내기2001진보정치학교
 20030801 발족선언문(시대의 양심은 과연..)
 20030801 민주노동당 청년단국학생위원회칙(개정안)
 20030811 민주노동당서울특보-613시청에서다시자주평화...
 ✓20030812 민노당특보-국방비증액반대미국의한반도전쟁위협
 ✓20030812 중앙당성명>정전협정50주년을 맞이하여
 ✓20030812 중앙당논평>대북불가침보장은필요하다(03.8.2
 ✓20030812 민노당자주통일위원회특별성명>미국의전쟁위협은
 20031007 전국학생위원회 6차 운영위원회
 20031007 민주노동당 당발전특위 서울토론회
 20031010 미국의이라크점령반대
 20031010 5차WTO각료회의 무엇이문제인가
 20031010 하반기정세전망-한반도반미반전정세전망
 20031010 민노당 연세대학생위소식지1-이라크에한국군병동현
 20031010 5차WTO각료회담저지투쟁
 ✓20031015 민주노동당특보(전투병과병반대국민투표
 20031031 민주노동당(전쟁반대한반도평화-한반도전쟁위기고조)
 20031031 민노당울산광역시지부2003년임시대의원대회자료집

민주노동당자주통일위원회
 민주노동당자주통일위원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경주시지구당
 민주노동당연세대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연세대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서울대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충남지부단국학생위
 민주노동당단국대학생위원회
 김혜경
 권영길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연세대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연세대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연세대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연세대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연세대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울산지부

서울지청 강서경찰서
 서울지청 강서경찰서
 경북지청 경산경찰서
 서울지청 동대문경찰서
 경북지청 보안과
 강원도지방경찰청 보안과
 강원도지방경찰청 보안과
 강원도지방경찰청 보안과
 경찰청(본청)보안국 보안3과⑥
 충남지청 보안수사 3대
 충남지청보안수사3대
 서울지청 남대문경찰서
 충남지청 조치원경찰서
 충남지청 조치원경찰서
 충남지청 조치원경찰서
 부산지청보안과
 서울지청 남부경찰서
 강원도지방경찰청 원주경찰서
 강원도지방경찰청 원주경찰서
 강원도지방경찰청 원주경찰서
 강원도지방경찰청 원주경찰서
 강원도지방경찰청 원주경찰서
 강원도지방경찰청 원주경찰서
 충남지청 보안수사1대
 울산지청 보안수사대
 울산지청 보안수사대

20031105	이라크전투병과병저지 학생당원교양자료집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서울지청 보안수사2대
20031105	서울시지부학생위원회14차운영위원회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학생위원회	서울지청 보안수사2대
20031105	서울시지부학생위원회 13차운영위원회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학생위원회	서울지청 보안수사2대
20031106	민주노동당특보-얼마나더죽어야노무현당신의정책을	민주노동당	서울지청 남대문경찰서
20031106	민주노동당특보-전투병과병반대국민투표실시하라	민주노동당	서울지청 남대문경찰서
20031106	민주노동당서울대학교학생위원회암시총회(03.10.17)	민주노동당서울대학교학생위원회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관악경찰서
20031107	2만민족고대인들의행동으로이라크파병막읍시다	민주노동당고대학생위원회	서울지청 성북경찰서
20031112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학생위원회 여름정치학교-정치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학생위원회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보안수사2대
✓20031113	민주노동당홍익대학생위원회당원모임자료	민주노동당홍익대학생위원회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조치원경찰서
✓20031113	민주노동당홍익대학생위원회하반기사업계획서(초)	민주노동당홍익대학생위원회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조치원경찰서
20040304	일하는사람들의희망민주노동당순천시지구당2기4차운영위	민주노동당순천시지구당	전라남도지방경찰청 보안과
20040304	민주노동당순천시지구당임시대의원대회(04.1.26)	민주노동당순천시지구당	전라남도지방경찰청 보안과
20040310	이라크전투병과병저지투쟁학생당원교양자료집	민주노동당연세대학생위원회	강원도지방경찰청 원주경찰서
20040429	판갈이는계속되어야한다	민주노동당선대본기획부장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노량진경찰서
20040520	5.18교양자료-미국의세계지배전략과전략적요충지인한반도	민주노동당세종대학교학생위원회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동부경찰서
20040617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2004년사업계획(수정본)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성북경찰서
20040701	대한민국대통령노무현을살인죄로고발합니다-터키시민인질	민주노동당을지지하는네티즌	전라남도지방경찰청보안수사2대
20040708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긴급지침623-1(04.6.23)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충청북도지방경찰청보안수사대
20040714	민주노동당특보-대한민국은통곡한다이라크파병철회하라	민주노동당	전라남도지방경찰청보안수사2대
20040722	민주노동당>2004진보배움터(04.7.14-16)	민주노동당전북도당	전라북도지방경찰청보안수사2대
✓20040722	평등연대마창지부배달호동지속보1.2(03.1.14)	민주노동당충남대학생위원회	충청남도지방경찰청보안수사2대
✓20040722	미국이라크전쟁은즉각중단되어야한다.(03.3.17)	민주노동당충남대학생위원회	충청남도지방경찰청보안수사2대
✓20040722	민주노동당충남지부학생위원회1기발족선언문	민주노동당충남지부학생위원회	충청남도지방경찰청보안수사4대
✓20040722	민주노동당충남지부학생위원회총노선	민주노동당충남지부학생위원회	충청남도지방경찰청보안수사4대